

통합 앞둔 광주·전남, 민심은 한곳만 보지 않았다

6·3 지방선거 결과 (1) 변화 감지된 정치지형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치러진 6·3 지방선거는 광주·전남 정치권의 향후 4년을 결정할 선거였다. 초대 통합시장과 통합 교육감, 광주 5개 구청장, 전남 22개 시장·군수,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한꺼번에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곧 통합체제의 방향을 이어나가게 됐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우세였다. 그러나 선거판 전체를 민주당 독주로만 해석하기에는 혁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남긴 흔적도 적지 않았다. 본보는 4회에 걸쳐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정치적 의미와 변화상을 짚어본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선택은 '민주당'이었다.

초대 통합시장 선거에서 민행배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통합시장·기초단체장·광산을 보선까지 민주 우세 장흥·신안 등 혁신당 승리…민주당 텃밭서 존재감 광양·강진·완도 무소속 생활…정당보다 인물 선택

대부분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했다.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통합체제 출범 초기 정치적 주도권은 민주당 손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 결과를 담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집중'이다.

통합시장과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민주당이 잇따라 승리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주요 정책과 현안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한곳으로 모였다.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대형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적 안정성에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만 봐도 흐름은 뚜렷하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신수정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모두 당선되며 민주당이 5개 자치구를 석권했다.

전남에서도 민주당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를 비롯해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진도 등 다수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재선인이다.

윤병태 나주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김산 무안군수, 김한중 장성군수 등이 다시 선택을 받았다.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도 유권자

들이 지역 현안을 이어갈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에는 놓치기 아까운 부분들이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조국혁신당의 약진이다.

장흥에서는 사순문 후보가, 신안에서는 김태성 후보가 군수에 당선됐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던 두 지역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혁신당은 통합시장 선거나 광역 정치 무대에서는 존재감을 키우지 못했지만, 생활정치와 지역 현안이 맞물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민주당 일색으로 굳어질 것 같았던 선거판에서 혁신당이 지방권력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도 빼놓을 수 없다.

광양시장 선거에서는 박성현 후보가 당선됐고, 강진에서는 강진현 군수가 재선에 성공했다. 완도에서도 김신 후보가 승리했다.

세 지역은 공통점이 있다.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지역 기반이 선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광양은 지역 산업과 도시 발전 전략, 강진은 현직 군수에 대한 평가, 완도는 지역 경제와 수산업 현안이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정치 이슈 속에서도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문제를 중심에 놓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선거와 함께 치러진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민주당 임문영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통합시장과 기초단체장, 국회의선거까지 민주당이 확보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정치 구도는 민주당 중심으로 짜이게 됐다.

지역 평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운영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혁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성과는 지역 정치가 더 이상 단순한 일당 중심 구조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국회 입성한 의원들의 선서 지난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정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분회의에서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송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규 의원,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

내달 '통합특별시' 출범... 10월 '중수청' 설치

행안부, '추정부 출범 1년' 성과 등 발표... 소비자쿠폰 등 경기회복 기여

오는 7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방자치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10월에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간 추진한 핵심 정책 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자쿠폰' 사업을 지원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

올해는 6조1000억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지난 정부 전역 삭감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원, 올해 1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도 핵심적인 성과다.

오는 7월 1일에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며,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각종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인 '사회연대경제'를 제

도화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찰국 폐지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성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틀을 마련하는 등 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행안부는 소개했다.

10월 2일부터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나눠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고,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전담하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모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지선 승리 자화자찬"... 민주당 텃밭서 자성 목소리

서울시장·부산 복구 등 주요 승부처 패배에 지도부 비판

6·3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서울시장, 대구시장, 평택을, 부산 복구 등 주요 승부처에서 패배했음에도 표면적인 결과로만 선거 승리를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은 지난 5일 SNS에 "선거가 끝난 지 이틀, 시원함보다는 답답함이 가슴을 누른다"며 "지방선거의 큰 의미를 담았던 것들이 민주당의 패배로 이뤄졌다"고 평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처절한 반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라며 "팬덤에 익숙한 정치 문화의 쇠신, 국민보다 앞선 권력에 대한 욕망의 정치 중지,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한 파트너정당의 바로 세우기 등이 우리의 숙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전남 여수)은 "70% 가까운 지

지를 받는 이재명 정부의 여당으로 치르는 선거였기 때문에 기대가 컸지만 최종 성적표는 결코 자화자찬할게 아니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와 평택, 부산 보궐선거의 패배는 아프게 다가오며, 좋은 분위기로 출발한 대구시장 선거와 경남도지사 선거의 패배도 너무 안타깝다"며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 대부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 내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더 많이 이겼으니 잘한 선거라는 식으로 열명땀땀 넘어가는 것은 당원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 "민주당 한쪽에서는 대승했다고 자화자찬"이라며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할 서울시장, 성남시장, 용인시장을

잃고, 평택을과 부산 복구를 넘겼으니 승리했다는 자화자찬이 참으로 공허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나 수도권 주요 단체장을 무더기로 내란동조 세력에게 넘겨주다니 정말 허탈하기 짝이 없다"며 "지금부터는 말만 아닌 실력있는 여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당권 투쟁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대통령 일 잘한다고 까불지 마라'라는 경고를 주셨다"면서 토론과 속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만 "대권을 겨냥한 정당대화로 내부 투쟁을 하면 총선, 대선 다 패배한다"며 "대통령이 일을 잘하도록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함께 뛰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서 호남은 철저히 외면받았다"며 "당대표는 호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청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직격했다."

이성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한병도 "국조 추진할 것"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국정 제안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납득도 안 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경위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선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생각"이라

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만간 국민의힘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 국정 내용과 형식 등을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없으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도 (국조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모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기준 정비해야"

박균택, 국립묘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은 과거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배제되어 온 국가유공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가유공자가 임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질병 또는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상·보훈 및 예우가 미비해 생계 곤란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던 시기에 발생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보훈 정책과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정비해 왔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상이등급 확대와 연금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국립묘지 관련 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 정비하면서 보훈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



명했다. 이어 "내란·외환·살인·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까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보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보훈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안장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법 시행령인 지난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의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내란·외환·살인·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박균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합당하게 예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결맞은 합당한 보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모 기자 solee235@gwangnam.co.kr